

건군50년 한국군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

한 용 원
(한국교원대 교수)

1. 서 론
2. 한국군의 창군·성장과정
3.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
4. 한국군의 사회적 역할
5. 21세기 한국군의 역할
6. 결 론

1. 서 론

신생국가의 군대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역할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파이(Lucian Pye)나 존슨(J. J. Johnson) 등은 개도국의 군이 근대화의 추진세력이 될 수 있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헌팅تون(S. P. Huntington)과 웰치(C. E. Welch) 등은 개도국의 군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제도로서의 군이 정치에 개입한 라틴아메리카 군대의 역할에 비추어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제도로서의 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분파 내지 파벌로서의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여 제도로서의 군을 정권의 배경막 내지 정권안보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정치적 군부와 제도적 군부의 역할은 동일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¹⁾ 따라서 논자는 이 글에서 건군 50년간 제도로서의 한국군의 역할에 관해서만 고찰키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제도로서의 군의 역할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군사제도가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적 필요성(functional imperative)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필요성(societal imperative)을 공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국가의 경제적 번영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 이기는 하지만 국방비를 줄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자거나 사회복지비로 전용하자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는 반면, 군대가 사회에 비해 발달된 제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군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군이 보수화되기 쉬운 것인데, 군의 사회적 필요성마저도 외시한다면 군을 게토(ghetto) 같은 존재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의 역할은 안보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적절히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군 50년간 한국군은 안보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1950년대의 안보적 역할과 1960년대의 사회적 역할은 팔복할 만하였다. 한국군은 1948년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창설되었으나 창군사가 분단사와 맞물려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군문화·일본군문화·미국군문화가 접합되어 시발함으로써 우여곡절 속에서 성장해야만 했다. 한국군은 1950년대에 북한군의 전쟁도발을 분쇄하여 국가를 수호하였고, 전후복구에 진력했으며, 1960년대에는 근대화의 기수역할을 담당했을 뿐

1) 한용원, “광복50년 국가발전에 있어서 군의 역할,”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9 국방」(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5. 10) 참조

아니라 우방의 지원을 위해 월남전에 파병하였고, 1970~80년대에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군의 창군 및 성장의 과정을 개관한 연후에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고, 21세기의 역할을 조망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 유산은 문화적·구조적 산물인 동시에 상황적·인위적 산물임이 분명하지만 제도로서의 군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황적·인위적 요인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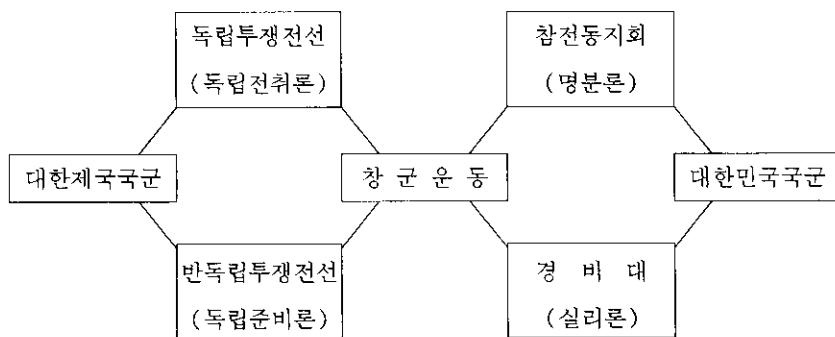
2. 한국군의 창군·성장과정

한국군의 창군과정은 ①민족자생의 창군운동과정, ②미군정의 경비대 창설과정, ③대한민국정부의 국군창설과정 등 3단계로 진행되었다. 일제의 강압으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국군이 해산되자 일부는 ‘독립 전취론’을 견지하고 독립투쟁전선의 광복군으로 활약하였고, 다른 일부는 ‘독립준비론’을 견지하고 반독립투쟁전선의 일본군 및 만주군으로 복무했으나 그들은 해방공간에서 함께 만나 창군운동을 전개하였다. 창군운동의 전개양상은 광복군의 국내지대 편성과 30여 개의 군사단체 결성으로 나타났으나 창군운동과정에서 “광복군을 모체로 국군을 편성해야 한다”는데 공동의 동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경비대를 창설하면서 민족자생의 군사단체들을 해체시키자 창군운동세력은 분열되었다. 즉 “광복군을 모체로 국군을 편성해야 한다”는 중견층의 명분론과 “경비대는 장차 국군이 될 것”이라는 소장층의 실리론으로 분열되어 소장층은 제도권 내의 경비대에 입대했으나 중견층은 제도권 밖에서 참전동지회(후에 육·해·공군출신동지회)를 결성하여 국군이 창설되기를 기다렸다. 1948년 8월 15일 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국군이 창설되자 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되고, 육·해·공군출신동지회 회원들이 국군에 입대함으로써 창군운동세력은 다

시 대한민국 국군으로 합류하였다.

그러므로 창군과정은 〈그림 1〉과 같이²⁾ 전개되어 창군운동과정에서 국군의 이념과 정신이 형성되고, 경비대창설과정에서 국군의 조직과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군창설과정에서 정신과 조직의 변증법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비대의 간부들이 20~30대의 소장층으로 형성되어 리더십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해방 직후의 사회의 사상적 혼란상이 경비대에도 과급되어 사상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경비대의 체질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제도권 밖에 있던 육·해·공군출신동지회의 중진 군사경력자들을 충원시켜 리더십문제를 해결하고, 광복군의 수뇌들이 육성한 청년단원들과 이북에서 월남한 우익청년단원들을 충원시켜 사상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림 1〉 창군과정의 전개

다음, 한국군의 성장과정은 ①1950년대 전쟁 및 정비기, ②1960년대 체제정립기, ③1970~80년대 자주국방기, ④1990년대 통일대비기로 전개되었다.³⁾ 한국군은 창군과 동시 경비대체제를 국군체제로 전환시켰으나

2) 한용원, “전군과 한국군 군대문화: 전통과 유산,” 「한국군 군대문화의 회고와 발전적 정립」(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8. 6), pp. 7~10.

3) 한용원, “국군50년: 창군과 성장,” 「국방연구, 제41권 제1호」(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8. 6) 참조.

군부반란사건이 연발하여 이를 진압하는 데 여념이 없어 겨우 소부대훈련을 마친 상황에서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하였다. 한국군은 전쟁전 10만명선을 유지했으나 전후에 65만명선으로 성장(T/O기준)했으며, 전시에 장교 및 하사관을 선발하여 미군사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1950년대에 10,000명 이상이 해외유학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전후에 종합행정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어학, 행정, 관리 면에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중에 한국군은 국가수호의 전통, 인명중시의 전통,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통을 확립하였고, 전후 복구활동에 참여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민교육도장의 전통도 확립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군체제의 정립은 5·16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이는 5·16세력이 국방쇄신의 차원에서 인사·병무행정 등을 개혁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도적·교육적 조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60년대에 한국군은 군인사법을 제정하고 장병의 급여수준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장교단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ROTC제와 3사관 학교제를 실시하고, 합동참모대학과 국방대학원 산업과정을 설치·운영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군의 발전방향을 좌우하던 미군사고문단이 철수하자 전투발전사령부(후에 연구발전사령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교리와 절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군은 전후복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대화의 기수역할을 수행하고, 해외파병전통과 재해복구 및 대민봉사활동전통을 확립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휴전선의 방어임무를 전담하게 된 한국군은 「국군 현대화계획」(1971~75)을 수립하여 육·해·공군의 장비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방8개년계획」(1974~81)을 수립하여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였다. 율곡사업으로 지칭되는 전력증강사업은 미국의 대한무상군원이 종료(1978)됨에 따라 신설된 방위세(1975)를 재원으로 하여 각종 기본병기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는데, 1차율곡사업에 이어 2차율곡사업(1982~86)과 3차율곡사업(1987~92)이 추진되었다. 1970~80년대 자주국방기에 한국군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교리와 절차를 발전시키고 무

기와 장비를 개발하였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운영(1978)하여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군사관계를 대미일변도로부터 점차 다변화시키고, 분쟁지역의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 참여했을 뿐 아니라 3군통합전력의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군구조를 개선하고, 1994년 12월 1일부로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의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3.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

한반도는 지난 50여 년 간 휴전체제로 인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의 정규군이 대치한 가운데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벌여 왔다. 창군 이래 한국군은 한편으로 북한군의 6·25남침을 비롯하여 1·21청와대기습 등 각종 무력도발을 분쇄·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했을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한국전쟁시에는 ①창군요원의 29%를 포함한 275,000여 명의 희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였고, ②1·4후퇴시에는 민족의 군대로서 북한피난민의 보호작전과 구출작전을 전개했으며, ③3년간 전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전개되었음에도 민족문화재를 보호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전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64년부터 1973년 까지 10년간 연인원 312,853명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①미국으로부터 11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의 약속을 받아내었을 뿐 아니라 과월 장병의 수당과 과월업체의 수입이 총 10억 달러에 달해 경제발전을 크게 뒷받침할 수 있었고, ②한국전쟁에 연인원 572만여 명이 참전하여 147,131명의 인명손실을 본 미군이 수행하는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한·미간의

안보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은 첫째,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둘째, 국가발전전략의 추진과 결부되어 수행되었고, 셋째, 남북한간의 적대와 의존의 동태적 대상관계의 전개와 국민의 반공·안보이념의 추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우선 정부수립 직후부터 월남전이 종료될 때까지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은 미국의 무상군원을 바탕으로 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무상군원은 1950년대에 한국의 국방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960년대에 50%, 1970년대의 전반기에는 31%, 후반기에는 1.5%를 각각 차지하여 한국의 경제력이 국방비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 큰 뜻을 담당해 주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30만명 수준)은 전전상태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후에 주한미군(1950년대 후반 8만명선, 1960년대 6만명선, 1970년대 4만명선)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국방재원의 일부를 부담해 주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 주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선건설·후통일론’에 의한 국가주도의 수출산업화정책을 추진하여 ‘선혁명·후통일론’에 의한 군사·경제병진정책을 추진한 김일성 주석과의 체제경쟁에서 (표 1)과 같이⁴⁾ 승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도 이룩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파병을 통해 한·일, 한·미간 밀월관계를 유지하여 부국강병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일로부터 손쉽게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화를 이룩하고, 생산된 제품을 미·일의 시장에 수출하여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이렇게 하여 산업화가 도약단계에 진입하자 그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성장을 지속시켰으며, 이 기간에 미국의 무상군원이 종료(1978년)되자 그는 방위세(1975년)를

4) 황의각, “남북한 경제의 구조와 역량,”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세종연구소, 1995), p. 274.

(표 1) 남북한의 1인당 GNP의 변화 비교

(단위 : 달러)

연 도	북 한	남 한
1961	195	82
62	211	87
63	225	100
64	240	103
65	248	105
66	255	125
67	225	142
68	232	169
69	239	210
70	304	252
71	374	288
72	422	318
73	489	395
74	559	540
75	751	590
76	775	797
77	725	1,008
78	956	1,392
79	1,114	1,640

재원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을 달성코자 하였다.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은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국의 국력신장이 맞물려 1960년대 말부터 모색되었으며, 넉슨독트린에 의해 주한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국군현대화계획」(1971~75)을 추진하여 육·해·공군의 장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974년부터 율곡사업으로 지칭되는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국산화와 양산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 제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한국군은 지상방위의 책임을 전담하게 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분수령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부국강병정책은 1970년대 후반기에 그의 리더십의 경직화와 핵개발의 기도로 인해 미국의 압력을 받아 유연성을 상실케 되었다. 그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이탈하자 미국은 주월한국군 철수 후 코리아게이트사건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였고, 그가 1976년 한국원자력기술공사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창설하여 핵연료의 국산화 개발에 착수한데다가 1978년 장거리유도탄을 개발하여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장거리 유도탄의 생산을 유보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므로 그를 계승한 전대통령은 원자력기술공사와 핵연료개발공단을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통합·개편하는 조치를 통해 핵개발 카드를 사실상 포기하였다.

다음,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은 남북한간의 적대와 의존의 동태적 대쌍관계의 전개와 국민의 반공·안보이념의 추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북한은 1960년 미일안전협정이 체결되자 이를 한·미·일 남방3각동맹으로 간주하여 1961년 소련 및 중국과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 북방3각동맹을 형성하였고, 한국이 휴전 후 미군이 주둔한 가운데서도 60만 병력을 계속 유지하자 북한은 중국군의 철수에 대비, 인민군을 강화시켜 1959년에 80만명으로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노농적위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1962년 4대군사노선을 결정·채택하여 국방의 자위정책을 추진한 북한은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한 기간인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수많은 게릴라와 특공대를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파(북한의 대남적대행위는 1965년 88건, 1967년 784건, 1968년 985건에 달했음)시켜 한국의 치안을 교란하여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게릴라의 거점을 확보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에 한국은 향토예비군을 창설(1968)하여 후방방위력을 강화시키고,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현대화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기본무기와 장비의 국산화와 양산화는 물론 한국형 전차, 함정, 전투기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도 군수공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해 핵무기카드 외에도 미사일카드, 화생방카드, 슈퍼건카드를 확보하게 되었고, 상비군사력도 100만명을 초과하여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1990년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①전쟁수행 잠재력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우세하지만 ②동원군사력 면에서는 남북한이 대체로 비등하고, ③상비군사력 면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⁵⁾

한편 안보가 불안한 국가에서는 군의 안보적 역할 수행이 국민의 안보 의식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군사문화가 사회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해방공간에서 한국의 사상적 혼란상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해방된 민중들의 개혁열정과 영합되었지만 ①우익민족세력이 반탁운동을 반공운동으로 휘몰아 갔고, ②반란사건의 여파로 민중들의 반공의식이 쏙 트기 시작했으며, ③농지개혁으로 민중들의 개혁열정이 진정된데다가 ④숙군작업을 통해 군내의 좌익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한국전쟁시 북한군을 격퇴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할 수 있었다.

전후에는 일반민중들의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의식이 심화된데다가 준전시상태(전후 상당기간 휴전상태는 준전시상태로 인식되었음)가 지속됨으로써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절대다수 국민들의 능동적 동의 내지 수동적 동의를 유도해 낼 정도로 확산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도구와 슬로건뿐 아니라 정치사회화와 국민교육의 기본가치(반공=민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권안보의 도구로 활용한 데 반발하여 4·19혁명 후 혁신 세력의 정당운동·노동운동·통일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에 5·16세력은 이를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았을 뿐 아니라 안보상황론을 개발독재론과 결부시켰으며, 특히 유신체제

5) 국방부, 「국방백서」(1990), p. 124.

하에서는 총력안보논리를 내세워 민중들의 정치참여를 제한시키고 통일안보논리를 내세워 체제강화를 꾀하였다.

이처럼 반공·안보이념이 정권안보의 도구로 이용되는 와중에서도 반공의 최첨단 보루로서 기능했던 한국군에는 자연스럽게 반공문화가 정착되었고, 따라서 군문을 거쳐 간 1,500만명의 장병들은 한국사회에 반공·안보이념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전개된 한국사회의 반체제운동은 탈정부적·탈안보적 차원의 민중통일론을 제기할 정도로 반공·안보이념을 훼손시켰다. 더욱이 자라나는 세대들은 가난과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대이므로 성장과 안보이데올로기를 중시하지 않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안보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시켜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4. 한국군의 사회적 역할

창군으로부터 5·16까지 한국군의 발전방향은 미군사고문단이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군은 경비대 시절부터 미군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된 조직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경비대가 일본군출신이 주류를 형성했음에도 미군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합리주의, 기술주의, 직업주의가 제고되어 근대적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군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군은 한국전쟁 직전 10만명선을 유지했으나 1952년 5월 36만명선으로 증대되었고, 1953년 5월 65만 5천명선(T/O기준)으로 양적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전쟁중에도 전전에 창설한 각종 병과학교를 재개교하고 4년제 사관학교를 창설했을 뿐 아니라 미군사학교에 장교 및 하사관을 선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950년대에 10,000명 이상이 해외유학을 경험하였고, 전후에 종합행정학교를 설치하고 어학·행정·관리과정을 개설·운영하여 1950년대에 20,000명 이상을 배출함으로써 질적인 성장

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과 고문에 힘입어 정부 및 민간부문보다 많은 건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중반 까지 지속되었다. 1961년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보유한 건설중장비는 불도저를 포함하여 총 1,100대에 불과하였고, 1967년에 2,877대로 증가했으나 이는 1967년 당시 군이 보유했던 크레인을 비롯한 4,000여 대에 비하면 1/3~1/2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술인력도 정부 및 민간부문은 1968년에 6,048명에 불과하였고, 1970년 12,826명으로 증가했으나 군에서는 1966~68년간 양성한 기술인력만 해도 31,000여 명에 달해 정부 및 민간부문은 군에 비해 1/5~1/3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⁶⁾ 이상과 같은 여건으로 인해 한국군은 1950년대에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전통을 확립하고 전후복구에 주역을 담당했으며, 1960년대에 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재해복구 및 대민봉사활동의 전통을 확립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군은 1960년대초 한국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된 집단이고 기술화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조국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전술했듯이 당시 군은 정부 및 민간부문보다 많은 건설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데다가 전후복구의 주역을 담당하여 노하우를 축적시켜 왔다. 특히 군은 미군의 공병자재를 지원받아 전쟁으로 파괴된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AFAK(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사업을 통해 900여 개의 학교, 200여 개의 병원 및 고아원, 100여 개의 교량을 복구하고 300여 개의 교회를 건립한 경험을 가졌다.⁷⁾ 그리고 당시 한국사회에는 공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경지의 정리는 물론 저수시설이나 제방조차 제대로 축조되지 않아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은 〈표 2〉와 같이 근대화 추진에 필수적인 사업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 공공시설 건설사업, 국토의 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6)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과 국가발전」(1992), pp. 124~126.

7) 백선엽, 「군과 나」(대북연구소, 1989), pp. 301~303.

〈표 2〉 군의 근대화과업 참여실적

구 분	추진연도	실 적	비 고
전 술 도로 건 설	1961~72	2,675km	1984년부터 거의 중단
일 반 도로 건 설	1958~92	2,564km	산악지역 및 해안지역
한·미합동도로건설	1960~72	확장 212km 포장 580km	USOM의 재정지원
경부고속도로건설	1968~70	31km	난공사지역 담당
기타고속도로건설	1990년대	34km	자유로와 서울외곽도로
교 량 건 설	1954~92	676개소	화천대교·필승교 등
공 공 시 설 건 설	1954~72	4,970동	학교 교실
	1957~67	165동	고아원 및 보건소
농 경 지 개 간	1961~75	2,170정보	연병력 13만여 명(장비 2만여 대)
농 경 지 정 리	1965~75	2,873정보	
방 조 제 촉 조	1960년대	매년 20~40km	연병력 2만여 명(장비 3천여 대)
조 립 및 사방사업	1961~90	2,200정보	

특히 군은 ①전술도로·일반도로·고속도로의 신설·확장·포장공사에 참여하되, 협준한 산악지역이나 해안격오지에 도로를 개발하고 난공사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했으며, ②교량건설에 참여하되, 화천대교, 필승교 등 군사작전과 직결되는 교량은 단독으로 건설하고, 천호대교, 김포대교 등은 지원형식을 취하였고, ③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학교 교실난을 해결하고, 전쟁고아들의 수용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고아원, 보건소 등 공공시설의 건설에 주력했으며, ④공업화의 추진으로 소외된 농촌주민들을 위해 경지의 개간 및 정리와 방조제의 축조 그리고 조립 및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군은 군대의 행정관리기법을 일반행정업무의 쇄신차원에서 전수하여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5·16 당시 군은 미군의 관리제도와 기술을 도입하여 사회에 비해 월등한 관리능력을 보유하였고, 특히 타이프라이터 활용, 사무표준화, 문서 및 보고통

제 등의 행정관리기법을 정착시켰으나 일반행정부처에서는 일제식민지 행정제도 및 관례를 전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군은 행정부처에 행정관리 기법을 전파시켜 한국행정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군의 근대화과업 참여는 군이 민간부문보다 월등한 장비와 노하우를 보유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업화의 여파로 인해 민간부문의 장비와 노하우가 군을 앞서게 된 1970년대 후반기부터 군의 참여는 도로 및 교량건설과 조립 및 사방사업으로 제한·축소되었다. 그러므로 군의 근대화과업 참여는 그 팔목할 실적에도 불구하고 15여 년 간에 걸친 한시적 기여를 불면케 되었다. 하지만 1960~70년대 범세계적인 개발연대의 시대정신에 부응한 자랑스러운 업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근대화에 기여한 군의 역할은 수정주의자들이 한국의 근대화의 기원을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구하고, 산업화과정의 강성국가와 관료제를 식민지의 유산으로 보는 견해가⁸⁾ 허황된 것임을 입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한국군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한국군은 ①창군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문을 거쳐 간 1,500만명의 장병들이 군생활을 통해 반공·안보의식과 집단주의정신을 제고시키고 인내심과 독립심을 배양케 하였다. 그리고 한국군은 ②창군이래 1965년까지 각종 군사기술학교의 통신, 수송, 항공, 공병, 항해, 전자 등 454개 과정에서 60여 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배출하는 등⁹⁾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 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한국군은 ③창군이래 1970년대 초까지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창군직후부터 문맹퇴치를 위한 6주간의 한글반을, 1954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과정을 교육하는 12주간의 기초반을, 초등학교 5~6학년과정을 교육하는 12주간의 국민반을,

8) 예컨대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Cornell Univ. Press, 1987).

9) 육군사관학교, 「군대와 국가발전: 자료집」(1981), p. 100.

1955년부터 중학교 1~2학년과정을 교육하는 15주간의 중등반을 각각 개설·운영하여 기초반은 1962년에 종료하고, 기타반은 저학력자를 정집 대상에서 제외시킨 1970년대 초까지 지속하여 한글반 59만여 명, 기초반 13만여 명, 국민반 15만여 명, 중등반 12만여 명 등 총 100만여 명을 교육시켰다.

나아가 한국군은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활동과 격오지 방역 및 진료활동, 농촌일손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현혈활동 등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우선 군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구조활동과 복구활동을 전개했는데, 주요한 구조활동 실적으로는 1969년 2,444명, 1984년 9,930명, 1987년 6,740명, 1990년 12,331명을 각각 구조하였고, 복구활동을 위해 1960년대에 185만여 명, 1970년대 120만여 명, 1980년대 410만여 명이 각각 동원되었다. 다음 군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벽지 및 도서지방의 주민들을 상대로 진료활동 및 방역활용을 전개하여 격오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했으며, 또한 군은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활동에 나서 적기영농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군은 산업화의 여파로 인해 ①공해가 심화되자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고, ②대형사고가 빈발하자 현혈활동을 전개하여 1990년대에 국내 총현혈량 중 군현혈량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군의 사회적 역할은 근본적으로 군이 사회보다 장비와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화의 여파로 사회가 군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이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고,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 역할의 수행이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도 기술인력의 양성보다는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며,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활동은 천재뿐만 아니라 대형 인재로 확대될 것이고, 대민봉사활동은 무의촌지역의 감소와 농촌영농의 기계화로 인해 격오지 진료 및 방역활동과 농촌일손돕기활동은 축소될 것이나 산업화의 부작용과 개인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환경보호활동과 현혈활동은 확대될 것이다.

5. 21세기 한국군의 역할

21세기 한국군의 역할은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민주화와 통일의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크며, 따라서 21세기 한국군의 역할에 관한 키워드(keyword)는 ‘자주국방의 강화’와 ‘민족통일의 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통일논리는 ①선평화·후통일의 논리, ②점진적·단계적 접근의 논리, ③과정으로서의 통일의 논리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한국의 안보정책도 ①안보목표를 과거의 대결지향의 대북한 대응에서 나아가 통일지향의 민족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②안보전략을 과거의 정치군사전략으로부터 총괄적 안보전략으로 전환시켜 가며, ③군사정책은 지상군 위주로부터 3군의 균형발전으로, 병력집약형으로부터 기술집약형으로, 대북 억제로부터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¹⁰⁾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는 사회주의세력의 쇠퇴와 해체, 선진 자본주의세력의 상대적 부상, EU 같은 지역행위 주체의 자율성 증가, 세계적 조직 및 기구의 역할 증대, 민족 및 종족의 독립성 강조 등 변화양상을 시현하면서, 방어적 국가안보와 공동안보 형태의 지역안보 모색에 따라 국제 군사화 추세가 완화되고 번영·복지를 위한 첨단과학기술의 추구와 정보력의 강화를 지향하는 데 반해서, 동북아의 정치군사질서는 중·일간의 지역질서 주도권 경쟁, 일본의 군사대국화 위험성, 중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 북한체제의 불안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등이 중요한 위협요소로 남아 있어¹¹⁾ 지역국가들이 쌍무간·다자간 안보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미

10)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1995), pp. 38~39.

11) 하영선, “21세기 신문명과 한일관계의 미래,” 「한일관계 50년의 쟁점과 과제」(한국정치학회, 1998. 7), pp. 1~9.

국이 아시아의 안보를 관리하기 위해 아·태지역에 유럽과 같은 규모의 10만명의 해외주둔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의 자주성과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전력구조와 첨단무기 중심의 전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혼란과 외부세력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군이 안보·전략·통일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군의 자주국방은 한국방위의 한미동맹화와 한국화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도로 변경시키되,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에 미군을 계속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¹²⁾

더욱이 탈냉전 이후 아·태지역에서는 협력적 안보의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안보대화를 추진하는 등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능력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21세기에 한국군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첨단과학기술화, 고급 인력화는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 한국군은 사회적 역할보다 안보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군의 사회적 역할은 군이 사회보다 장비와 기술 면에서 앞설 때나 군이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효과적인 민군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강조되는 것인데, 21세기에 한국의 사회는 현재처럼 군대보다 앞서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하며, 군부

12) 미국은 1989년 「동아시아 전략구상」을 통해 한국방위에 있어 주한미군이 맡아 온 주도적 역할을 지원적 역할로 전환키로 하고 감군조치를 취하다가 1995년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 10만 명의 미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아·태전략을 변경하였음.

정치의 청산으로 확산된 국민의 총괄적 안보의식은¹³⁾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군이 위상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군이 안보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형전력의 강화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한국군은 전력을 병력과 장비의 총화인 유형전력과 능력과 기술의 총화인 무형전력으로 구분하여 유형전력의 강화는 국민의 책임이지만 무형전력의 강화는 군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해 왔고,¹⁴⁾ 따라서 1990년대에도 군사대비태세의 강화가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21세기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 한국군은 자주국방능력의 제고에 필요한 조기경보 및 감시장비와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도입을 건의·확보하여 운용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과정에서의 안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공동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보대화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의 총괄적 안보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문적 능력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 한국군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측면보다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측면과 재해의 복구 및 구조활동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교육도장 역할도 기술인력의 양성 측면보다 안보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안보의식의 배양도 군사적 측면보다 총괄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¹⁵⁾ 그리고 군이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는 역할은 안보 및

13) 총괄적 안보는 군사적 방위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 정치적 자주, 사회적 통합과 전략적 자원의 확보 등을 포괄하는총체적 안보 내지 포괄적 안보를 지칭함.(백종천·이민룡, 「한반도 공동안보론」, 일신사, 1993, pp. 88~116 참조)

14) 국방부, 「선진국군」(1984), pp. 178~179.

15) 냉전시대의 안보교육은 반공·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군사적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두었으나, 탈냉전시대의 안보교육은 자유·평화·번영·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총괄적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임.

통일과 관련하여 21세기에 매우 중요하다. 군이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게 되면 군의 총괄적 안보능력과 통일대비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 총괄적 안보의식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지난 50년간 한국군은 한편으로 북한군의 남침 및 각종 무력도발을 분쇄·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했을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수행되었고, 특히 미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국방재원의 일부를 부담해 주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무상군원을 제공해 주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 주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강병을 지향한 국가주도의 수출산업화정책을 추진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도로 변경되었다.

한편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되고 기술화된 집단으로 성장하여 사회보다 월등한 장비와 기술을 보유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근대화의 기수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로서 군문을 거쳐 간 1,500만명의 장병들이 군대생활을 통해 책임 있는 사회적 역군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그중 200만명에 달하는 장병들은 기술인력으로 육성되어 사회에 배출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군은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하였고, 대민봉

사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은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는 데 등한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성을 제대로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21세기에 한국군은 세계질서의 재편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민주화와 통일의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그 역할이 규정될 공산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사회적 역할보다 안보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안보적 역할은 무형전력의 강화에 진력하되, 통일과정에서 필수적인 총괄적 안보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고, 사회적 역할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는 측면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